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감독규정 제정안 2단 비교표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 및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호에서 “종합금융회사”라 한다)와 합병한 기관(「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p> <p>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p> <p>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제4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p> <p>아. 종합금융회사</p> <p>자.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p> <p>차.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다만,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는 목적으로 발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은 제외한다.</p>	<p>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는 목적으로 발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2.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법 제2조제1호가목·라목 및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서민의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낮춰주기 위해 체결하는 대출에 관한 계약
<p>가.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자</p> <p>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p> <p>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p> <p>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p> <p>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겸영여신업자”라 한다)</p> <p>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p> <p>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자</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1) 금융투자업자 2) 단기금융회사 3) 자금중개회사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투자에 관한 계약(이하 “연계투자계약”이라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계약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	
②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4.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p>	<p>② 영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을 사원에게 취득하게 하는 업(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농업협동조합법」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보험업법」 5. 「상호저축은행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은행법」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13. 「중소기업은행법」 14. 「한국산업은행법」 1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④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같은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같은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영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자(소속 단체를 포함한다)가 업무와 관련된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2.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p>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대부업자가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 4. 신용협동조합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가. 집합투자업자</p> <p>나. 증권금융회사</p> <p>다. 단기금융회사</p> <p>라. 자금중개회사</p> <p>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p>	
<p>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p> <p>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이하 “대출성 상품”이라 한다): 제10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p> <p>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p> <p>가. 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다만, 제9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 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제10항제1호가목·나목·바목·아목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기금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p> <p>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다. 제10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p> <p>라. 나목에 준하는 외국인</p> <p>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이하 “보장성 상품”이라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p> <p>가. 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p> <p>나. 제10항제1호가목·나목·아목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2호나목1)·2)에 해당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p> <p>다. 제10항제1호자목4)에 따른 외국인</p> <p>라. 제10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p> <p>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금융회사(제5항제2호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p> <p>⑨ 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계약체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p>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모든 금융상품</p> <p>가. 지방자치단체</p> <p>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하는 자</p> <p>다.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p> <p>1)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p> <p>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p> <p>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p> <p>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p> <p>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p> <p>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p> <p>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p> <p>8)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p> <p>라. 제6항제2호(대부중개업자는 제외한다)부터 제7호까지의 자</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마.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제2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같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9)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p>바.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p> <p>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p> <p>아. 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p> <p>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외국 정부</p> <p>2) 국제기구</p> <p>3) 외국 중앙은행</p> <p>4) 제8항 및 제10항제1호라목·마목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등</p> <p>5) 제10항제1호다목에 준하는 외국인</p> <p>2. 예금성 상품</p> <p>가. 법인, 조합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p> <p>나.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해당하는 자. 다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는 제외한다.</p> <p>3. 대출성 상품</p> <p>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등</p> <p>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겸영 여신업자</p> <p>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p> <p>라.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사업자금의 조달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 <p>4. 투자성 상품</p> <p>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제16호에 해당하는 법인등</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제17호에 해당하는 개인</p> <p>다. 가목·나목에 준하는 외국인</p> <p>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p> <p>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p> <p>5. 보장성 상품</p> <p>가.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p> <p>나.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p> <p>다.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p> <p>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p> <p>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체결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p> <p>1. 제10항제1호가목·나목·바목·아목</p> <p>2. 제10항제4호가목·나목</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① 법 제3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p> <p>② 법 제3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p> <p>③ 법 제3조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p> <p>④ 법 제3조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p>	
<p>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6항제2호의 대부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2. 제2조제6항제2호의 대부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3. 제2조제6항제3호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4. 제2조제6항제4호의 신용협동조합: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5. 제2조제6항제5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p> <p>6. 제2조제6항제6호가목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p> <p>7. 제2조제6항제6호나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p> <p>8. 제2조제6항제6호다목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p> <p>9. 제2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p>	
<p>제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취급할 금융상품의 유형(법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품유형을 말한다. 이하 “상품유형”이라 한다) 각각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이 항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금성 상품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p>	
<p>가. 해당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연수·평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람</p>	<p>제3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영 제5조제2항제1호가 목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연수·평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p>
	<p>1. 대출성 상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가 신용 및 부채 각각의 관리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p>
	<p>2.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자가 보장성 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p> <p>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p> <p>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3.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출 것</p> <p>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 한다)</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이하 이 조에서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p>
<p>나. 해당 상품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 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품유형의 금융상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분쟁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p>	<p>② 영 제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을 말한다.</p>
	<p>1. 대출성 상품: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윤리성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p>
	<p>2.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전문성·윤리성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교육</p>
	<p>3. 투자성 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윤리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교육</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2. 전산설비 운용·관리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3.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책무의 이행,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및 법 제28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설비·통신수단을 갖추는 것	
4. 고정사업장 및 사무장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갖추는 것	③ 영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정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5.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추는 것	
6.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하는 것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상품자문의 대상이 투자성 상품인 경우 가. 금융상품자문의 대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으로 한정하는 경우: 1억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및 이와 유사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	④ 영 제5조제3항제1호가목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영 제5조제3항제1호가목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제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나. 그 밖의 경우: 2.5억원	
2. 금융상품자문의 대상이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보장성 상품인 경우: 각각 1억원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속 임직원이 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영위하는 업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점경쟁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p>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p>	<p>⑤ 영 제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보험업 2.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3. 금융시장 관리업 4.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p>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⑨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전자적 장치(「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만 적용한다)</p>	<p>⑥ 영 제5조제9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2. 자문에 응하여 금융소비자에 제공한 서비스(이하 “자문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집중되지 않을 것 3.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필요 시 기존에 제공한 자문서비스의 내용을 조정할 것 가. 자문서비스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금융상품 거래 성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
<p>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대출성 상품(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제상품(제2조제5호에 따른 공제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같다)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개인이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연수·평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람</p>	<p>제4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연수·평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자격을 구분하여 인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2개 이상의 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p>
<p>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성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분쟁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p>	<p>② 영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자격에 필요한 전문성·윤리성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을 말한다.</p> <p>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2.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생명보험협회 4. 손해보험협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2. 법인이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모두 갖추는 것	
3. 개인이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연수·평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람	③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제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인증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②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하 제50조제1항에서 “대출성 상품 온라인 판매대리·중개업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업무 수행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된 기준을 말한다)을 갖출 것 가. 영업 관련 직무 수행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나. 영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또는 자격요건	
다. 광고물 제작 시 준수해야할 절차·방법 및 기준	
라.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마.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절차·방법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둘 것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전산설비 운용·관리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	
3.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상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전자적 장치에 설치할 것</p>	<p>⑤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신용점수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3. 제1호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
<p>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p>제8조(등록수수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p> <p>1.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20만원</p> <p>2.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2만원</p>	
<p>제9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별표 1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첨부해야 할 서류는 별표 2와 같다.</p> <p>③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내용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5조(등록의 신청 등) ① 영 별표 2 제1호에서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다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p> <p>1. 대주주에 관한 사항</p> <p>2.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업종에 관한 사항</p>
	<p>② 영 별표 2 제2호에서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p> <p>1. 대주주가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2. 등기부등본</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3. 주주명부 4.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인의 고지사항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등록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의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의 흠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제10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p> <p>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p> <p>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다만,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p> <p>2)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다만,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경우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p>	
<p>7.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특성상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기 어렵거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낮은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p>	
<p>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별표 3의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킬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 중 일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6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금융상품자문업자: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소속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미만인 경우
	<p>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적용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 2. 영 별표 3 제2호가목1) 3. 영 별표 3 제3호 및 제4호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킬 것</p> <p>가. 자체 점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내부통제기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나. 임직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p> <p>다. 내부통제기준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중요한 변경내용이 제때 반영되지 않은 경우</p>	
<p>3.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③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설·변경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④ 별표 3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1조(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각각에 준하여 안정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자적 확인방식을 말한다.</p> <p>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p> <p>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 및</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 공제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되는 상품을 말한다.</p>	
<p>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p>	
<p>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p> <p>2. 연계투자계약</p>	
<p>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p>	
<p>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p> <p>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p> <p>가.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p> <p>나.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수준</p> <p>다. 위험에 대한 태도</p> <p>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p>	<p>③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p> <p>나.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수준</p> <p>다. 위험에 대한 태도</p> <p>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p> <p>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p> <p>나.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수준</p> <p>다. 계약 체결의 목적(다음의 대출성 상품에만 적용한다)</p> <p>1) 법 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대출</p> <p>2)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p> <p>4.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 판단 기준”이라 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p>⑤ 적합성 판단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제7조(적합성 판단기준 등)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 및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적정성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p>
<p>⑥ 법 제17조제4항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5와 같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⑦ 법 제17조제5항 단서·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금융소비자”라 한다)를 말한다.</p> <p>⑧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서면 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2. 전화 3.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4.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p>⑨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기 전에 알릴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 서면등(전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같다)으로 알리고 그 사실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에 대해 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확인을 받을 것</p> <p>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요청 방법</p> <p>나.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p>	
<p>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제12조(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p> <p>1. 보장성 상품: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p> <p>2. 투자성 상품</p> <p>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p>	
<p>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p>	<p>제8조(적정성 원칙)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생상품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2. 파생결합증권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p>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외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될 것 3.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아닐 것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라.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p> <p>마. 고난도금융투자상품</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금융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의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p> <p>사. 고난도금전신탁계약</p> <p>아. 고난도투자일임계약</p>	
<p>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p>	
<p>3. 대출성 상품</p> <p>가.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담보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p> <p>나. 증권 등 시장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p>	
<p>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p> <p>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서면등으로 알려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일반금융소비자에 서면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p>	
<p>1. 적정성 판단 보고서(별표 4 제2호 후단에 따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p>	
<p>2.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설명서”라 한다)</p> <p>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방식을 말한다.</p> <p>⑥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적정성 판단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⑦ 법 제18조제3항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5와 같다.</p> <p>⑧ 법 제18조제4항 단서·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금융소비자”라 한다)를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⑨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적용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서면등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p> <p>⑩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기 전에 알릴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 서면등으로 알리고 그 사실에 대해 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확인을 받을 것 <p>가. 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요청 방법</p> <p>나. 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적정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제13조(설명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1)의 “보장성 상품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된 위험보장사항·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보험금 2. 위험보장 기간 3. 보험료 납입기간 4.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 각각의 환급금 및 산출근거. 이 경우 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p>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2. 일반금융소비자 또는 피보험자(계약 체결 이후 위험을 보장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및 같은 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각각 위반한 경우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3. 「상법」 제647조에 따라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4.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계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에 한정한다)</p> <p>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 “투자성 상품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정보</p> <p>2. 그 밖의 투자성 상품</p> <p>가. 계약기간</p> <p>나. 금융상품의 구조</p> <p>다. 기대수익(객관적·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2)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p> <p>2. 그 밖의 투자성 상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 이 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p> <p>⑤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은 제외한다.</p> <p>1. 연계투자계약</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에 관한 신탁계약</p>	
<p>⑥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p> <p>1.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p> <p>나. 환율의 변동성(외국화폐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2. 금융상품의 신용등급 및 해당 금융상품을 발행한 자의 신용</p>	<p>제9조(설명사항) ① 영 제13조제6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이 조에서 “위험등급”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p> <p>2. 위험등급은 원금 손실 위험(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에 비례하여 구분할 것</p> <p>3. 금융상품의 발행인으로부터 위험등급을 확인받을 것(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아닌 경우에</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p> <p>3. 금융상품의 구조 및 원금손실가능 범위에 관한 사항</p>	<p>한정한다)</p>
<p>4. 그 밖에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② 영 제13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금융소비자의 환매나 매매가 용이한지에 관한 사항</p> <p>2. 그 밖에 원금 손실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p>
<p>⑦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는 불이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⑧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1)의 “예금성 상품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계약기간</p> <p>2. 이자·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p> <p>⑨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이자율(계약을 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 및 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한다) 또는 수익률. 이 경우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2.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는 불이익</p> <p>3. 계좌이체 제한 등 금융상품 이용 관련 제한사항</p> <p>⑩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1)의 “대출성 상품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계약기간</p> <p>2.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및 산출기준</p> <p>3.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사항</p> <p>⑪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는 불이익</p> <p>2. 신용점수(법인인 경우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치는 영향</p> <p>3. 원리금 납부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하 “연체이자율”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p> <p>4. 계약의 연장 거부 등 금융상품 이용 관련 제한사항</p> <p>⑫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의 제공기간</p> <p>2.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내용 및 그 사유등을 일반금융소비자에 사전에 알린다는 사실 및 알리는 방법</p> <p>⑬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가목은 대출성 상품에 적용하지 않는다.</p> <p>1. 금융상품판매업자등</p> <p>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별 수수료 등 부대비용</p> <p>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p> <p>2. 금융상품판매업자</p> <p>가. 「예금자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등 법률상 기금에 따라 보호되는지에 관한 사항</p> <p>나.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법률에 따라 가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전까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는 자를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포함한다)</p> <p>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p> <p>1) 보험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계정에 따라 수익률이나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p> <p>2) 만기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계약인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p> <p>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 취급하는 보장성 상품: 판매·제공 또는 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매와 별도로 일반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할 수 있거나</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그 계약의 피보험자(계약 체결 이후 위험을 보장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사실</p> <p>라. 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p> <p>1)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한다) 및 산출기준</p> <p>2) 보험료 중 사업비(계약을 체결·관리하는데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뺀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영되거나 적용이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및 그 사업비 금액(적용이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p> <p>마. 계약 이후 고령자가 되는 시점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보장성 상품: 보험료 변동에 관한 사항</p> <p>바. 해약환급금(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 위험보장 내용이 동일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지급될</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수 있는 다른 보장성 상품</p> <p>사. 일반금융소비자에 배당이 지급되는 계약: 배당에 관한 사항</p> <p>아. 그 밖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워 민원이 빈발하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p> <p>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9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별표 3</p> <p>나. 그 밖의 투자성 상품</p> <p>1) 위험등급에 관한 다음의 사항</p> <p>가)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p> <p>나)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p> <p>2) 계약상 만기에 이르기 전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사항</p> <p>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매월 사용대금 중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위험성 및 관련 예시</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4.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
<p>⑭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방식을 말한다.</p> <p>⑮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기존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3.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이하 “금융상품자문서”라 한다)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나. 자문업무 관련 금융상품에 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④ 영 제13조제15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을 예치받거나 운용·판매(중개를 포함한다)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수입 또는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산정방식 및 규모</p> <p>2. 다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함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에 알려야 할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및 주요 업무</p> <p>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함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유</p>
<p>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p> <p>5.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p>	
<p>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⑤ 영 제13조제15항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p> <p>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p> <p>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p> <p>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설명서”라 한다)를 제공한 경우</p> <p>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약: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p> <p>나.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 해당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p>
<p>⑯ 법 제19조제3항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제14조(설명서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명을 할 때(전화를 이용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 후 지체 없이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에</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설명서(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자문서를 말한다)를 서면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요약서(이하 “핵심설명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p> <p>1.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p> <p>2.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사항</p>	<p>제10조(설명서) ① 영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핵심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림·도표와 함께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p> <p>1.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구별되어 해당 계약에 특징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이 경우 가목보다 나목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가. 금융소비자에 제공되는 편익</p> <p>나. 가목에 따른 편익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 및 지불해야 하는 비용</p> <p>2. 금융상품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p> <p>가. 모든 금융상품: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의 접수건수가 전체 접수건수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사항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p> <p>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p> <p>다. 보장성 상품: 해약환급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p> <p>라. 대출성 상품</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대출: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p> <p>2) 신용카드: 제9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p> <p>3.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p>
	<p>② 영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예금성 상품</p> <p>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p>
<p>③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p> <p>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명을 한 내용과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 및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임직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명을 직접 수행한 사람의 서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나.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④ 설명서·핵심설명서 및 금융상품자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서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작성할 것 2.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 3. 일반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선택해야할 계약조건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 간에 비교가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 5.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얻는 이익 및 그 편익을 얻는데 필요한 요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것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6.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서를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영 제1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말한다.
⑤ 그 밖에 설명서·핵심설명서 및 금융상품자문서 각각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명서(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에 한정한다)에 별표 4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전제공 성격의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시설대여·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않은 경우 나. 금융소비자의 고의·과실이 없었으나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에 따라 취득한 재화가 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부당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2. 그 밖에 계약의 해지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③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p> <p>1. 금융소비자가 개인인 대출(법 제2조제1호가목·라목 및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동업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출은 제외한다.</p> <p>2. 금융소비자가 법인인 대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출은 제외한다.</p> <p>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p> <p>나. 「상법」에 따른 최대주주</p> <p>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p> <p>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p>	<p>제11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15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p>1.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p> <p>2.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금융소비자가 공동주택 관련 이주비 또는 중도금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시공사</p> <p>② 영 제15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주주·유한책임사원 또는 각각의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보유한 지분의 합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주주·유한책임사원 및 각각의 특수관계인</p> <p>2.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한 회사</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3. 금융소비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p> <p>가.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업의 주체인 법인인 경우: 시공사 등 그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p> <p>나. 금융소비자가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사업자금의 조달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해당 자산 또는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p>
<p>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축소·변경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경우</p>	<p>③ 영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경우”란,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축소·변경된다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서면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면 2.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3. 전화 4.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5.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2. 연계·제휴서비스등을 금융소비자에 불리하게 축소·변경하는 경우.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이 3년 이상 제공된 상태에서 해당 연계·제휴서비스등으로 인해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축소·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④ 영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같은 조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행위로 보지 않는다.</p> <p>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자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p> <p>2.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축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당초 연계·제휴서비스등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해야 한다.</p> <p>3.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1. 대출성 상품 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이하 “대출성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p>	
<p>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금융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포괄근담보가 금융소비자에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나. 대출금액에 대하여 통상적인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기금에서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적으로 제3자의 보증(연대보증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행위</p> <p>3. 대출성 상품등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p>	
<p>가.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 그 금융소비자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정한다)에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p>	<p>⑤ 영 제15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p> <p>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p> <p>가. 금융업</p> <p>나. 보험 및 연금업</p> <p>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p> <p>2.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중소기업</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⑥ 영 제15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p>
<p>나. 계약 체결 이후 단기간 내 동일한 금융소비자와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에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⑦ 영 제15조제6항제3호나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구속성 판매 간주행위”라 한다)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금전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금전을 제공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집합투자증권, 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투자에 관한 계약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계약</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2)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금융소비자(투자성 상품인 경우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한정한다)가</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계약에 따라 매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지금액”이라 한다)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은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p> <p>2. 예금성 상품(금융소비자가 입금과 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약: 금융소비자(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의 월지금액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은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월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p> <p>나.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하는 금액이 총 100만원 이하인 경우</p>
	<p>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성 판매 간주행위로 보지 않는다.</p> <p>1. 금전제공계약이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인 경우</p> <p>가. 「보험업법」 제105조제6호의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에 관한 계약</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나. 신용카드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p> <p>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p> <p>2. 금전제공계약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예금성 상품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예금성 상품을 담보로 자금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p> <p>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p> <p>4.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p> <p>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p> <p>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p> <p>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해당 보험료가 「법인세법」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계약</p> <p>5. 다음 각 호의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p> <p>가.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장성 상품</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단체의 구성원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나.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p> <p>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2호에 따른 장기손해보험으로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장기화재보험 등 채물보험계약 체결</p> <p>6. 그 밖에 해당 계약을 사회통념상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그 사실을 금융소비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각각에 준하여 안정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자적 확인방식으로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p>
<p>4.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호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금전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대출에 관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 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계약의 변경·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p> <p>5.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해지 또는 계약에 따른 금융상품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p> <p>6.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이후 자체 점검, 민원 또는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이하 같다)·검사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확인된 후에도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는 행위</p> <p>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실</p> <p>나. 계약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p> <p>7. 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같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두 번 이상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8. 금융소비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p> <p>9.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해지 신청 또는 법령에 따른 이자율·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행위</p> <p>10. 이자율 및 대여 가능한 금전의 한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p> <p>가.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정보</p> <p>나. 금융소비자의 신용 및 상환능력</p> <p>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⑨ 영 제15조제6항제11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전을 제공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금융소비자의 월지급액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은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공제상품</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상품</p> <p>다. 상품권(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p> <p>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소비자에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p> <p>3.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p> <p>4.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행위</p>
<p>⑦ 제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법 제21조제6호가목에서 제외되는 행위: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권유하는 행위</p> <p>2. 법 제21조제6호나목에서 제외되는 행위</p>	
<p>가. 계약 체결을 권유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p>	<p>제12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p>
<p>나.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유형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은 각각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본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p> <p>가. 수익증권</p> <p>나. 장내파생상품</p> <p>다. 장외파생상품</p> <p>라. 증권예탁증권</p> <p>마. 지분증권</p> <p>바. 채무증권</p> <p>사. 투자계약증권</p> <p>아. 파생결합증권</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p> <p>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p> <p>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계약</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p> <p>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에 관한 계약</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본다.</p> <p>1.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다른 파생결합증권</p> <p>2.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p> <p>3. 금융상품의 구조(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다른 장외파생상품</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가. 선도 나. 스왑 다. 옵션
<p>② 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피보험자를 말한다.</p> <p>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법령,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갖추지 않은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 2. 기존에 보유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 그 금융상품보다 불리한 금융상품을 취득할 것을 일반금융소비자에 권유하는 행위 3. 법 제17조제2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작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4. 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등으로 받는 행위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5.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전의 대여나 그 대리·중개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금전의 대여와 연계하여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p>	
<p>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④ 영 제16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1.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p> <p>가.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p> <p>나.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p> <p>다. 금융소비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p> <p>라. 투자성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금융소비자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2.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 금융소비자(이하 “신용카드 회원”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p>제17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p> <p>1.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p>	
<p>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등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금융상품자문을 유인할 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p>	
<p>②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이 경우 자회사·손자회사가 운영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에 대한 광고로 한정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2. 증권발행인 또는 매출인. 이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광고로 한정한다.	
3.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업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제18조제1항에 따른 “협회등”에는 제외한다)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라 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상품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가. 금융상품의 명칭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다.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p> <p>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p> <p>나. 그 밖의 경우: 이자·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p> <p>3. 예금성 상품</p> <p>가. 이자율·수익률 각각의 범위 및 산출기준</p> <p>나. 이자·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p> <p>4.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신용카드</p> <p>1) 연회비</p> <p>2) 연체율</p> <p>나.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p> <p>1) 연체율</p> <p>2) 수수료</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p> <p>4)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p> <p>다. 그 밖의 대출성 상품</p> <p>1) 이자율(연체 시 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산출기준</p> <p>2) 이자 부과시기</p> <p>3) 나목3)</p> <p>⑤ 법 제22조제3항제3호나목1)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p> <p>2. 그 밖의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p> <p>⑥ 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수익이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p> <p>⑦ 법 제22조제3항제3호라목에서 “대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신용점수 등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인 경우에 담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 <p>2. 원리금 상환방법</p> <p>⑧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금융상품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모든 금융상품 및 그에 관한 업무</p> <p>1) 해당 광고가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p> <p>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만 적용한다)</p> <p>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등 법률상 기금에 의해 보호되는지에 관한 사항(대출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나. 보장성 상품 및 그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1)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데</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p> <p>2) 보험료·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p> <p>가) 주된 위험보장사항·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보험금 예시</p> <p>나) 특정 시점(계약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 각각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p> <p>다) 해약 시 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p> <p>다. 투자성 상품 및 그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무. 다만, 2)는 투자성 상품에만 적용한다.</p> <p>1)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p> <p>2)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p> <p>라. 대출성 상품 및 그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 다음의 사항 및 관련 경고문구</p> <p>1)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2)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p> <p>3)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p> <p>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p> <p>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p> <p>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p> <p>3. 금융상품자문업자: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p>	
<p>4. 그 밖의 사항: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 판단이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제13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의 내용) ① 영 제17조제8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투자성 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p> <p>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이 호에서 “수상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칭, 수상등의 시기 및 내용</p> <p>나.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다.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p> <p>라. 세제(稅制) 변경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 제도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의 시행 시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제도 관련 중요사항</p> <p>2. 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p> <p>가. 연계·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p>
<p>⑨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 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p>	<p>② 영 제17조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③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보장성 상품에 관한 광고</p> <p>가. 다음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알릴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상품의 편익 2) 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3) 금융상품의 특성 4)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p>나.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 시간이 2분 이내일 것</p> <p>2. 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광고에 영 제17조제8항 각 호의 일부 내용을 제외함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을 것</p>
<p>⑩ 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1.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과 관련하여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상</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품등의 거래조건, 편익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거나 그 변동가능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지 않는 행위</p> <p>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 체결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과장·왜곡·은폐(일부 축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p> <p>3.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등의 편익이나 불리한 사항을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p> <p>4.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를 하여 우월함을 강조하거나 다른 금융상품등이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는 행위</p> <p>5.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해당 금융상품등의 편익만을 강조하거나 다른 금융상품등의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행위</p> <p>6. 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p>④ 영 제17조제10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1. 모든 금융상품: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p> <p>2. 보장성 상품</p> <p>가. 보험금 지급사유나 지급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p> <p>나.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광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는 방법(음성 또는 자막 등을 말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p> <p>가) 보험료, 위험보장사항 및 만기에 지급받는 환급금 등의 특징</p> <p>나) 가)에 관한 제약요건</p> <p>2)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한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p> <p>3. 투자성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조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관련 세부내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
<p>⑪ 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⑫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p> <p>⑬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포함한다)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4. 과거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실적(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광고에 포함해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⑤ 영 제17조제1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집합투자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탁업자(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는 사실 3. 준법감시인 및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이 집합투자재산이 적법하게 운용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사실 4.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의 평가결과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7.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p> <p>8.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p> <p>9. 비교하는 방식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및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p> <p>10. 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p>
<p>제18조(협회등의 광고 심의)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광고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광고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p> <p>1. 대부업협회: 대부업자 및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p> <p>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같은 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이하 이 호에서 “생명보험회사”라 한다)로 구성된 협회: 생명보험회사 및 그 회사가 취급하는 보장성 상품·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p> <p>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같은 법에</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호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로 구성된 협회: 손해보험회사 및 그 회사가 취급하는 보장성 상품·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p> <p>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p> <p>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신용협동조합이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보장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p> <p>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p> <p>7.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광고</p> <p>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광고</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② 협회등은 광고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자료를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징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협회등의 광고심의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4조(협회등의 광고심의)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이 지켜졌는지를 확인(이하 이 항에서 “광고심의”라 한다)할 것 2. 광고심의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금융상품의 특성 및 민원 빈도, 광고매체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유사한 광고들 간에 광고심의를 한 결과가 불합리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할 것 <p>② 광고심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광고물을 심의할 것. 다만, 광고가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이라 한다)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광고심의가 종료된 후에 광고심의 결과(광고에 수정이 필요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없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통보할 것.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품광고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통보해야 한다.</p> <p>3. 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p> <p>③ 그 밖에 광고심의를 위한 기준 및 절차는 협회등이 정할 수 있다.</p>
<p>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광고물은 그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광고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5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은 그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편익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해 부각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p> <p>1.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내용</p> <p>2. 금융상품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p>
<p>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는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광고물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광고물 일체를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일 2. 금융상품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시행일의 전일</p>	
<p>④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을 포함한다)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광고물(매체 및 광고기간을 명시해야 한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p>제20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말한다.</p> <p>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p> <p>가. 계약서(보장성 상품의 경우에 「보험업법」에 따른 청약서를 말한다)</p> <p>나. 약관</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다. 설명서 및 핵심설명서(제13조제1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이하 “보험증권”이라 한다) 또는 보험증권에 준하는 공제증권</p> <p>2. 금융상품자문업자: 제1호가목·나목</p> <p>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제13조제15항제1호·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가. 대부업자</p> <p>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p> <p>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 <p>3. 보장성 상품에 관한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쓰는 경우</p>	
<p>4. 그 밖에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③ 계약서류는 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없이 금융소비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등(전화는 제외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④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계약서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⑤ 그 밖에 계약서류의 종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6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서류에 대한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하지 않도록 할 것 2. 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적 장치(「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할 것
<p>제21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5조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금융소비자로부터 보</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협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금융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p> <p>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이하 “보험설계사”라 한다): 같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험중개사(「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p> <p>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대리점. 다만,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다.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p> <p>2. 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자신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사람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p>	
<p>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③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소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2.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동일인이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각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하나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목의 행위는 제외한다.</p> <p>가.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p> <p>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p> <p>다.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자가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대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p> <p>라.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자가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p> <p>마.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둘 이상의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바.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제17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영 제21조 제3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나 증표를 위조하여 게시하거나 금융소비자에 제시하는 행위</p> <p>4.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정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 등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p> <p>5. 자신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p> <p>6.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명의(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p> <p>7.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업을 영위하는 행위</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시장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8.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나 같은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각각의 금융소비자별 또는 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하는 것처럼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계약체결등을 대리·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다.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금융소비자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라.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p>	
<p>9.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② 영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2.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행한 투자성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3.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개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을 통해 그 금융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4.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p> <p>나.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p>
<p>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 업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수수료를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과 거래규모, 업무의 난이도 및 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5조제3항에서 “재산상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가격의 할인 2. 금전등의 대여 3. 보험료 등의 예약에 따른 수익 4. 계약 체결의 대리·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보전 또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는 손실에 대한 보상</p> <p>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한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p> <p>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① 법 제26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예탁금(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예탁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p> <p>2. 금융소비자로부터 청약, 해지 등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p> <p>3.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를 수탁받은 경우에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명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증표·표지를 포함한다) 및 업무 내용</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의 및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었는지 여부</p>	
<p>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제18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① 영 제2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내용 나. 금융소비자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다.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2. 투자성 상품: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3.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전자적 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험설계사 이력(위탁계약을 체결했던 법인 및 그 법인에서의 위탁업무 수행기간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이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1. 법인인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p> <p>2. 개인인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표(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할 것</p>	<p>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p>
<p>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②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증표를 제시할 것</p> <p>2. 전화를 통한 권유, 전자금융거래 등 금융소비자와 직접 만나서 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금융소비자가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표지 및 증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제23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 제공하고자 하는 소액의 경품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p> <p>② 법 제2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으로 정한 보수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 2. 자문업무 제공에 따른 보수 및 그 부과기준 3. 금융소비자가 자문업무 제공내용에 따라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독립적, 중립적, 객관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한글표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④ 법 제27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⑤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계약의 체결과 해지 나. 자문에 응하여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업무 3. 다른 법인이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다만,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등을 예탁받는 행위 6.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정해진 보수 외 금전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7.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8.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제19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영 제23조제5항제8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2.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나. 분기별로 임직원의 투자성 상품을 매매한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제24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p> <p>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p> <p>가. 금융상품의 계약체결등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p> <p>나.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준수에 관한 자료</p> <p>다. 광고 관련 자료</p> <p>라. 회계처리에 관한 자료</p> <p>마.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p> <p>1) 청약의 철회</p> <p>2) 계약의 해제·해지</p> <p>3)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p> <p>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p> <p>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p> <p>가. 법인인 경우</p> <p>1)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료</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p> <p>나. 개인인 경우: 가목2)의 자료</p> <p>3. 금융상품자문업자</p> <p>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료</p> <p>나.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p>	
<p>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관련 제1항제1호가목의 자료를 위험보장기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p> <p>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등 조직 내부 경영에 관한 자료</p> <p>2. 제1항제3호나목의 자료</p>	<p>제20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을 말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의 자료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로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④ 금융소비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열람 목적 2.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3. 열람 방법 	<p>② 금융소비자는 영 제2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여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열람 목적: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 제기 내역 2.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제1호의 내용과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간의 연관성을 기재할 것
<p>⑤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일을 말한다.</p> <p>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소비자에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열람이 가능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나.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다. 열람 방법 2.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이유 다. 이의제기 방법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3. 열람이 불가한 경우</p> <p>가. 열람이 불가한 사유</p> <p>나. 이의제기 방법</p> <p>⑦ 법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연계·제휴서비스등제공업자 등 관계되는 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p> <p>2. 다른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p> <p>4.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자료의 열람이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⑧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수수료: 자료 열람 관련 행정처리비용</p> <p>2. 우송료: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든 실제 비용</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5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금융교육기관”으로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p> <p>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p> <p>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p> <p>3.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금융역량 조사</p>	<p>제21조(금융교육)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p>
<p>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의 수행계획 및 실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금융교육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p>	<p>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이 항에서 “수탁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금융교육협의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1. 연간 수탁업무 수행계획: 직전연도 12월말</p> <p>2. 연간 수탁업무 수행실적: 다음연도 3월말</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제26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기획재정부 4. 교육부 5. 행정안전부 6. 보건복지부 7. 고용노동부 8. 여성가족부 <p>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의장(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회의는 위원(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p>	<p>3. 제1호 수행계획에 따른 개별 업무 수행결과: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p> <p>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p> <p>⑤ 의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제1항 각 호의 자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⑦ 그 밖에 금융교육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교육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p>	
<p>제27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자가 취급하는 예금·적금 2.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취급하는 대출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계좌 4.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5. 집합투자증권 6.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이 조에서 “비교공시”라 한다)의 내용은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교항목”이라 한다)으로서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p>	<p>제2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및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p>
<p>③ 비교공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할 것 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3. 내용의 정확성·중립성·적시성을 유지할 것 4.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일 것 5.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 내용의 신뢰성 및 유용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상품(이하 이 조에서 “비교공시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시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교항목”이라 한다)과 차이가 없을 것 2. 비교항목으로 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공시 시점
<p>④ 금융위원회는 협회등에 비교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시기, 작성방법(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협회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p>	<p>③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이 조에서 “비교공시”라 한다)를 위해 협회등이 금융감독원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자료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 제공하는 시기 및 자료 제공방법</p> <p>3. 비교공시 내용이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감독원장에 협조할 필요가 있는 사항</p> <p>가. 협회등</p> <p>나. 영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p> <p>4. 그 밖에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p>
<p>⑤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 내용의 주기적인 개선을 위해 매년 비교공시 내용 및 관련 전산처리시스템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p>	<p>④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전산처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공시정보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p> <p>1.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전산처리시스템</p> <p>2. 협회등이 비교항목을 공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p>
	<p>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협회등의 조치결과도 확인해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⑥ 그 밖에 비교공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⑥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제5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협회등의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p>⑦ 그 밖에 비교공시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p>
<p>제28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p> <p>1. 연간 영업규모 등 일반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p> <p>2. 금융감독원장이 접수한 민원</p>	<p>제23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실태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태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다.</p> <p>1. 실태평가의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p> <p>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실태평가 주기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주기에 따라 실태평가를 실시할 것</p> <p>3. 다음 각 목의 자는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p> <p>가. 직전연도에 실태평가를 받은 자</p> <p>나. 해당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자율진단(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스스로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제공한 자.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상을 정하여 자율진단을 요청해야 한다.</p> <p>② 영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진단 결과 2.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 또는 조치내용 3.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4. 그 밖에 실태평가 대상을 선별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p>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운영 및 이행의 충실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항목”이라 한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다만, 별표 3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 <p>③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를 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시하기 전에 평가대상에 평가의 기간, 방법, 내용 및 책임자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④ 금융감독원장은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량적·비계량적 지표 (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라 한다)를 사용할 것 2. 평가대상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을 반영할 것 3. 평가지표는 평가항목을 확인하는데 적정할 것 4. 평가결과(평가항목별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것 <p>⑤ 금융감독원장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관련 협회등 및 금융위원회에 알린 후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평가대상은 평가결과를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평가를 받을 때까지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⑦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금융감독원장은 실태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태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을 확인할 것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2. 개선계획 확인 후 1년 이내에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할 것
	④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p>제2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 나.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p>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0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한다.</p> <p>④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4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 4. 법령 및 약관상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방법 5.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제30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 법 제34조제3항제1호·제5호 각각의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의 경력이 15년 이상일 것. 다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각각의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경우로 본다.</p> <p>2. 법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은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하여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일 것</p>	
<p>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원(같은 항 제6호의 사람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p>	<p>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p> <p>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법무부</p> <p>나. 법원행정처</p> <p>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p> <p>라.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p> <p>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p> <p>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 규모의 소비자단체</p> <p>3.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협회등</p> <p>4. 법 제3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제2호나목</p> <p>나. 협회등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1개 법인</p> <p>5.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p> <p>나. 「의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p>
<p>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p> <p>1. 신청인과 조정대상기관(이하 각각의 자를 “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소를 말한다)</p> <p>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연락처 및 주소</p> <p>3. 신청의 취지 및 관련 사실관계</p> <p>② 신청인은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p>1. 신청서</p> <p>2. 제1항제3호 관련 증거자료</p> <p>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p> <p>③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④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에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⑤ 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서 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p> <p>제32조(분쟁조정 절차) 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당시 이미 소가 제기되었거나 분쟁조정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청서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장이 제31조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청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또는 왜곡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 4. 신청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5.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p>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내용(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권고를 거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감안하여 조정위원회 회부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p> <p>가. 분쟁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 규모</p> <p>나. 분쟁조정의 신청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소비자의 규모</p> <p>다. 유사한 분쟁조정 선례나 판례의 존재 여부 및 적용가능 여부</p>	<p>제26조(분쟁조정의 절차) 영 제32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금융상품이 동일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유사한 분쟁에 대해 법 제3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20명 이상일 것</p> <p>2. 금융소비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한 사안으로서 관련 분쟁조정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다르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3. 그 밖에 분쟁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p>
<p>2. 그 밖에 신청내용의 복잡성 및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고하기보다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p>	
<p>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각각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당사자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안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의 내용 2.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사실 3. 법 제3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효력 <p>제3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지명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은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2. 회의 참석 위원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방법 <p>⑤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안전에 대한 사실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에 걸린 기간은 30일(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데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p> <p>제34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① 당사자는 분쟁조정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당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법 제41조제2항·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p> <p>제35조(소액분쟁사건)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제3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p>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p> <p>1. 보장성 상품.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p> <p>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해당 금융상품이 보장하는 혜택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p> <p>나. 제3자를 위한 보증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 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말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p>	제27조(청약의 철회) ① 영 제37조제1항다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을 말한다.
<p>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p> <p>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를」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한정한다)</p> <p>나. 고난도투자일임계약</p> <p>다. 신탁계약(금전에 관한 신탁계약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한정한다)</p> <p>3. 대출성 상품.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p> <p>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다만,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에 관한 계약</p> <p>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가 표시한 청약의 철회의사를 받기 전에 해당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p> <p>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p>	
<p>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8항 각 호의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③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면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그 사실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은 제외한다)로 알려야 한다.</p> <p>④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p> <p>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체결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 지급한 비용은 제외한다.</p> <p>⑥ 일반금융소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의무보험”이라 한다)에 대해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에 다른 동종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p> <p>⑦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신탁에 관한 계약으로 인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부득이하게 재산세(신탁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등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그 비용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지급하여야 한다.</p> <p>⑧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그 계약 내용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기간 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예탁한 금전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의한다는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반금융소비자는 같은 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p> <p>⑨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등”이라 한다)의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재화등의 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p> <p>⑩ 법 제46조제3항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각각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약관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p> <p>⑪ 법 제46조제3항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p> <p>2.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문에 응한 수수료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p> <p>가. 수수료를 자문에 응하는 횟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기까지 자문에 응한 횟수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그 밖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그 계약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p> <p>⑫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재화등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체결등을 위하여 제3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한 경우에 해당 금전은 돌려주지 않는다.</p>	
<p>⑬ 그 밖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해왔던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금융상품판매업자는 철회의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를 일반금융소비자에 발급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하여금 보험료 납입 관련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p>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7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 법 제19조제1항·제3항, 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를 위반한 사실(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사실”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예금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을 말한다) 중 먼저 도달한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장성 상품: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 2. 투자성 상품: 최초로 수수료를 납부한 날. 다만,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운용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 한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에 따른 금전·채화 등을 최초로 지급한 날 	
<p>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이하 이 조에서 “계약해지요구”라 한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계약해지요구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상품의 명칭 2. 법 위반사실 3.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④ 금융소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의무보험”이라 한다)에 대해 계약해지요구를 할 경우에 다른 동종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p>	
<p>⑤ 법 제47조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한다)란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계약해지요구서의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빠진 경우 3. 법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4. 금융소비자가 계약 후 발생한 자신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당 계약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취한 경우 6.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p> <p>⑥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들은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거절사유를 알리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와 그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법 제19조 위반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p> <p>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p> <p>1.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계약해지요구를 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수락 여부를 알리기가 곤란한 경우</p> <p>나. 관련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를 일정 기간 유예한 경우. 이 경우 유예한 기간에 금융소비자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p> <p>2. 정당한 사유 및 그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은 경우</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3. 계약해지요구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과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p> <p>4.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다만, 금융소비자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p> <p>5. 계약해지요구서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불이익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p>	
<p>6.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요구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등 계약해지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⑧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이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그 밖에 계약의 해지요구권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9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p> <p>②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는 금융상</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품판매업자와의 업무 위탁·제휴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상호, 소재지, 주주·임직원 현황 등 경영 일반 2.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3. 자문업무를 제공 절차 4. 재무현황 5.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6. 보수 부과기준 및 산정근거 7.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하여 대가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8. 업무 위탁·제휴 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제휴 내용 9.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법 제12조제4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p>10. 그 밖에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제28조(업무보고서 등) ① 영 제39조제2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처벌법」을 위반하여 제재 또는 형벌을 받은 경우 그 사실</p> <p>2. 자문대상 금융상품 중 대주주·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p> <p>3. 겸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4.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관련 계약 및 수수료 수입 내역</p>
<p>③ 그 밖에 업무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 내용(이하 “업무보고서등”이라 한다)에는 해당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대표자와 작성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한다.</p> <p>③ 업무보고서등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업무보고서등의 서식,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p>
<p>제40조(변동사항의 보고) ①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p> <p>②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말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써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시에 관한 사항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금융소비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받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항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내용 보고에 관한 사항 <p>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상품의 구조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금융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p> <p>2.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p>3. 그 밖에 제1호·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p> <p>1. 공시 등 다른 조치가 보다 효율적인 경우</p> <p>2.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없애거나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중단한 경우</p> <p>3. 그 밖에 제1호·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9조(판매제한·금지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판매제한·금지명령”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1. 판매제한·금지명령 대상자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알릴 것</p> <p>가. 판매제한·금지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p> <p>나. 영 제41조제3항에 관한 사항</p> <p>다.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 및 예상시기</p> <p>라. 가목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p> <p>2. 판매제한·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근거 자료를 포함한다)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p>가.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시급성</p> <p>나. 판매제한·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로 입는 경영상 불이익</p> <p>다. 그 밖에 판매제한·금지명령 대상자가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분석 등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p>
	<p>② 금융위원회는 판매제한·금지명령을 한 경우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p>1. 해당 금융상품 및 그 금융상품의 판매기간</p> <p>2. 관련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p> <p>3. 판매제한·금지명령의 내용·유효기간 및 사유. 이 경우, 그 명령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p>4. 판매제한·금지명령이 그 발동시점 이전에 체결된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p> <p>5. 판매제한·금지명령 이후 그 조치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p> <p>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항</p> <p>가. 금융소비자 보호</p> <p>나. 공시로 인해 판매제한·금지명령 대상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금융소비자 보호와 관계없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제한·금지명령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판매제한·금지명령 대상자에 알리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p>1. 판매제한·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판매제한·금지명령 대상인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없애거나 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중단한 경우</p> <p>2.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제한·금지명령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p> <p>가. 당초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사유</p>

시행령 제정안	감독규정 제정안
	나. 판매제한·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로 입는 경영상 불이익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11조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2020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